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지역공동체의식과 정치성향의 효과 검토*

구 기 환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공동체의식 요인을 살펴보고, 그 관계 사이에서의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유형의 공동체의식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에 효율적인 촉진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의 참여를 제고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전국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N=622)를 활용해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 애착과 거주지역, 이웃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지역 문제 발생 시 적극적 해결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역 애착과 이웃 관계 및 거주지역이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참여의사는 향상된다. 더불어 거주지역 애착과 도시재생 적극참여의사 사이에 정치성향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진다. 셋째,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의 소속감과 이웃 관계 만족도가 높고 진보적인 정치성향일수록 공청회 등의 참여의사가 높아진다. 또 거주지역의 소속감과 공청회 등 참여의사 사이에 정치성향은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지역공동체 의식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치성향 역시 유효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특정 정치성향에 편향되지 않게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 포용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주민참여, 참여형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공동체의식, 정치성향

I. 문제 제기

주민참여는 다수를 포함하는 공공계획에서의 결정형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시민개입이나 시민 영향력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Zimmerman, 1972). 특히 도시의 정책적 결정과 관련한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주민 스스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이

* 이 연구는 <2023 한국도시재생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연구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나 미래상, 발전구상 등을 포함한 공공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수법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책결정 방식이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의해 과학적 논리나 계량화된 실제적 지식에 근거해 전문영역에서 진행되었다면, 주민참여에 의한 협력적 도시계획수법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주민참여과정에서 주민들은 도시 공공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공청회나 공람에 참여한다. 또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지역문제 해결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를 포함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황희연·이민화, 2020).

오늘날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다양한 정책수립 같은 많은 행정영역에서 주민참여 제도가 활용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입 이후 상향식 도시 정비방식인 도시재생사업이 주요한 도시정비 접근방식이 되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민참여는 도시재생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구기환·김세용, 2023),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선행연구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이상화된 수단으로만 적용되는 주민참여는 시민 및 전문가의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Burke, 1968). 국내에서도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 및 주민참여 행정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민참여제도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보단 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정명은, 2012). 게다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을 사업의 주체로 설정하며 일종의 교조적인(dogmatic) 접근으로 강제된 주민참여가 도시재생에 적용되면서, 주민참여가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더욱 어려운 지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에서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인 것이다(김세용·박현수, 2006; 양재섭·김태현, 2011; 홍성우, 2016). 하지만 주민참여는 귀찮고 어려운 방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 방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도시 전체의 획일적인 접근의 도시계획으로는 지역 고유의 잠재력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에 적절한 양질의 도시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Zimmerman, 1972). 특히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등의 도시재정비가 주로 마을 단위의 작은 구역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적합하고, 그러한 도구로서 주민참여는 한국적 맥락에서 필수적인 도시계획의 접근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은 유효한 역할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공동체의식은 “특정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일체화되며 공동된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욕구충족을 기대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문형·정문기, 2015). 관련한 여러 국내 선행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다양한 행정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에 영향력 있는 지표로 보고되고 있으며(양덕순·강영순, 2008; 최문형·정문기, 2015), 특히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있어 지역공동체는 유력한 설명변수로 확인되고 있었다(진은애·이우중, 2018; 김나형·문국경, 2022). 이들 선행연구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다양한 행정계획에 주민참여를 이끄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지점에서 유용한 자료들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민참여의 정의가 거시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은 이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해 검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적절한 분석모형이라는 것을 지지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는 정치성향 변수의 역할을 주목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진행과 동시에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며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최혁규, 2021) 정치성향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식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논쟁적 측면이 도드라졌다. 즉, 도시재생이 일종의 진보정치의 산물과 같이 여겨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이 첨예해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두 변수의 인과관계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변수(moderator)로서 정치성향은 고려되지 못한 채, 예민한 주제로 기피되며 관심의 영역 밖에 있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전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민의 지역공동체의식과 도시재생사업 참여 의사와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가지는 어떠한 유형의 공동체 의식이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촉진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특히, 중재변수로 정치성향 변수를 투입해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은 주민의 정치이념적 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영향력을 살펴본다. 특히 진보적 정치성향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포된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치적 색안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통해 이 연구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방향에 적절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참여 논의의 시발점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참여적 민주주의’에 있다. 당시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권력의 초집중화, 지역만의 독특한 조건들을 무시한 획일적인 도시 정책의 개발, 거대한 관료제 문제 등으로 인한 ‘근린의 정치적 소외(political alienation)’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급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시청으로 대변되는 공공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즉, 선출직 정치인이나 전문화된 관료와 같은 ‘전문 행정가’ 들이 보이는 문제해결 태도는 지역을 방관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의 영

토에 시민을 배제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에서 주민참여는 시작되었다(Zimmerman, 1972).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검토해보면, 주민참여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Huntington & Nelson, 1976), 혹은 권력이 없는 일부 시민들이 공격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Verba, 1967), 직접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의사결정과정과 집행방식에 있어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Strange, 1972) 등으로 설명되곤 한다. 특히 도시계획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는 공식적인 정부의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정의되곤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매력적인 보고서와 유인물을 제작하고, 공청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Graves, 1972). 특히 공청회(town meeting) 같은 참여방식은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면서도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자율적 해결방법으로서 중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Tocqueville, Mansfield & Winthrop, 2010).

주민참여는 크게 첫째, ‘행정주도형’, 둘째, ‘민관협력형’, 셋째, ‘주민자치형’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Arnstein, 1969). 먼저 행정주도형 주민참여는 관에서 주민참여과정을 주도하고 주민이 이에 따라가는 경우이다. 주민은 관의 요구에 따라 관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고 의견의 반영 여부도 정책담당자에게 달려 있다. 법령에 따라 규정된 공람이나 공청회, 위원회 등이 대표적이고 반상회 및 주민투표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민관협력형 참여는 행정과 주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공동의 책임하에서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관이 자금, 인력, 기술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민관협력형 참여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참여방식이 아닌 청원, 진정, 민원 등 행정 관행이나 행정운영과 관련된 제도상으로 보장된 참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는 자생적 주민조직이 지닌 공동체 의식, 자치의식에 기반을 두어 지역의 정치·행정 및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말한다. 자생적 주민조직은 특정 직업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다수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함은 물론 스스로 그 해결 대안을 마련한다. 이는 관의 어용단체나, 정치 권력적 정당조직이나, 개인의 이해에 초점을 둔 사적 단체와 구별되는 공공적 공동체로서의 주민조직에 기반을 둔다. 즉,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지지가 결집하고 공통의 의견으로 수렴할 방안들이 모색된다.

2. 공동체의식

‘공동체(community)’는 이웃이나 마을, 도시 등의 영토·지리적 영역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역적 개념과 무관한 인간관계 연결성의 질과 같은 관계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Gusfield,

1975). 여기서 지리적 영역과 관계적 영역에서의 동질감이라는 구분 아래 공동체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공동체는 지리적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지점에서 이해되기도 하고,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면서 살아가는 장소나 집단, 개인적 삶의 가치나 의미,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등으로 설명되곤 하였다(채혜원·홍영옥, 2002; 임광명, 2017).

그렇다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인식은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가? 학술적으로 흔히 공유되는 공동체 의식의 정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구성원들 서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헌신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McMillan, 1976).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공동체 심리학적 접근에서 접근한 Glynn(1981)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는 먼저 '공동체 거주 예상기간', 다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인식되는 이웃의 수'로 확인되었으며,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안에서의 유능한 활동 능력 간의 긍정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Bachrach와 Zautra(1985)는 공동체 의식을 (1) '공동체에서 가정(home)에 대한 느낌', (2)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3)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동의', (4)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5)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관심', (6)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는 감정', (7) '공동체에 대한 애착' 등의 7개 항목으로 나눠서 측정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종합된 공동체 의식은 네 가지의 하위 요소들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속감(membership)'으로 개인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웃 주민들이 설정한 소속감의 경계는 누가 우리 지역의 소속인지 아닌지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매우 미묘한 것이다. 결국 이 공동체에 내 자리가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고, 공동의 상징체계를 공유하게 될 때에 주민공동체에 온전하게 소속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영향력(influence)'으로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집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응집력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하며,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집단 봉사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참여한다. 세 번째는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으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얻는 자원을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느낌을 의미한다. 이는 강화(concrete)의 일종으로 공동체에서 공유된 가치를 통해 응집력과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며, 자신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유된 정서적 연결(shared emotional connection)'로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역사, 공동의 공간과 시간, 경험 등을 공유해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공유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는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기반으로 공동의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공유된 감정적 연결과 유대감이다(McMillan & Chavis, 1986). 이 연구에서는 위의 4가지 공동체 의식의 분류에 따라 공동체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정치성향

정치성향과 도시계획의 관련성은 "시민의 참여가 권력으로 연결되며, 권력은 참여를 필요로 한

다(participation lead to power and that power requires participation)”는 전통적인 명제와 관련이 있다. 참여와 권력에 대한 계층론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도시의 대규모 토건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은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권력을 향유하는 상류층에 가깝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조합을 설립해 집단적으로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반면 낙후된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만들거나 권한을 받는 것보다는 예산을 분배받는데 중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주민참여는 현실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아가 주민의 삶에도 큰 영향이 없는 상징적 참여에 머물러 있다(Alford & Friedland, 1975).

정치적 성향과 활동은 주민참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역단체 등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들, 특히 정당에 가입한 경우에 주민참여에 우호적이고 지역사회에도 더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Verba & Nie, 1972; Burn & Konrad, 1987; Peterson, 1992; Claibourn & Martin, 2000). 이는 정치적 활동 자체가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대인 간 신뢰를 강화 및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Rahn, Brehm & Carlson, 1999) 정치이념적 성향이나 정치활동이 보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치성향은 중산층 이하, 자가소유자보다는 전·월세 등 불안정 주거에 놓인 시민들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특히 진보적 이념을 지닌 시민들은 개발자본과 이로 인한 불평등적 측면에서 개발을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손낙구, 2010; 정은경·정혜승·손영우, 2011). 게다가 진보적 정치성향은 서구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단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뿐 아니라, 비정치적 시민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이 보고되고 있다(이혜인·홍준형, 2013; 이혜림·이영라, 2020). 이러한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진보적인 정치성향은 행정제도로서의 도시계획에의 시민참여에 대한 참여요인으로서도 유효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의 주민들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일수록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기환·김세용, 2023). 이를 종합해보면, 지역 내의 개발과 보존을 두고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해 주민들은 정치이념적 관점에서 숙고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주민의 정치적 이념지향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참여의사에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지역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는 도시계획뿐 아니라 폭넓은 범위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관련한 여러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공동체의식은 다양한 행정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에 유의한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제주도를 대상으로 연구에서 연대감과 소속감, 충족감 및 친밀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의식은 주민참여 관심도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지만, 주민참여 의향에는 연대감만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 정도에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값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공동체의식이 어느

정도의 참여의사에 유의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단순한 참여의사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의 유인책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양덕순·강영순, 2008). 다음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주민 개별적 참여를 반응변수로 두고 분석했을 경우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필요의 통합과 충족, 공유된 감정적 연계가 모두 유의수준에서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집단적 주민참여를 반응변수로 투입한 경우, 상호영향의식과 공유된 감정적 연계만이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통제변수 중 거주기간이 집단적 참여에 유의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문형·정문기, 2015). 이는 개별적 참여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참여가 가능한 데 비해 집단적 참여는 더욱 복잡하고 전문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참여의 장벽이 높고, 장기거주 등의 지역 애착이 부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역공동체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된다. 특히 마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도시재생사업 중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마을기업, 일반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수록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자본 역시 크게 나타나는 점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는 매우 영향력 높은 설명변수임이 확인된다(진은애·이우중, 2018). 또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정주의사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적 자산 역시 도시재생 참여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다(강종구·문국경, 2022). 지역소속감과 애착심, 이웃과의 연대감을 합산한 공동체의식 변수와 도시재생 참여의사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김나형·문국경, 2022)에서도 공동체의식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영리성이나 공익성 외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권기택·정남식, 2020) 공동체의식은 도시재생사업의 필수적 참여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주민참여의 4가지 하위요인인 소속감과 애착, 이웃관계, 그리고 정주의사가 높게 나올수록 주민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사에도 높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연구가설 1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지역공동체의식(소속감, 애착, 이웃관계, 정주의사)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사(지역문제 적극해결, 도시재생사업 적극참여, 공청회 등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하는 주민참여방식 중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여기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정치성향은 일관적으로 보고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산되었으며(최상한, 2010), 자치단체장이 진보이념을 추구할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 확률과 제도화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호·윤성일, 2013; 유란희·김선형, 2017). 이와 함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방식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 제도 역시 지자체장의 진보성향이 참여제도의 도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으나, 진보성향의 지방의원 비율과는 유의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정인, 2022). 즉, 주민참여제도를 제도화하기를 추구하는 행정가들은 진보적 이념의 정치관을 가진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만족도

를 다룬 연구에서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구기환·김세용, 2023) 진보적 이념추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가설 2는 정치성향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2: 진보적 정치성향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사(지역문제 적극해결, 도시재생사업 적극참여, 공청회 등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보적 정치성향은 단순한 영향요인을 넘어, 공동체의식 및 주민참여 변수와 각각 영향을 주고 받는 인과관계에서의 중재적 변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련해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대화나 매스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박정서, 2012). 또 이웃 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모임, 사회단체 등의 네트워크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적극적 및 항의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양수, 2006). 특히 진보적 이념을 가진 경우에는 투표 등의 통상적인 정치참여 행위와 집회나 시위 등의 비 통상적 정치참여행위 모두에 적극적 참여율을 보이지만, 보수적 이념을 가진 경우 그와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이혜인·홍준형, 2013). 하지만 정치성향과 마을 활동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백영민 외, 2016)에서 기존 연구의 흐름과 달리 보수적인 이념성향일수록 진보적 성향보다 마을문제 해결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반대 결과도 있다는 점에서 쟁점적 측면도 존재한다. 결국,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치성향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조절변수로 두고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가설 3은 진보적 이념추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지역공동체의식과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될 경우, 그 경로 사이에 정치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진보적 정치성향은 지역공동체의식(소속감, 애착, 이웃관계, 정주의사)과 상호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의사(지역문제 적극해결, 도시재생사업 적극참여, 공청회 등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2019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의 설문자료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 자료의 일반국민 조사자료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읍면동 기준)에 거주하는 지역민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25일 ~ 2019년 7월 5일이며, 유의할당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참여경험 및 인식 정도, 도시재생의 만족도, 사업추진 및 관련 기관의 역량 정도, 추진주체 및 참여의사, 도시재생 정책과제에 대한 선호도, 갈등경험 및 갈등인식 수준, 도시 재생사업의 문제점, 갈등관리 역량 및 합의형성의 필요성 인식수준,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지역공동체 신뢰수준,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인식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최종현·최호진, 2019). 이 자료는 기존 연구의 조사들과 달리 전국의 도시재생뉴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 비교적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폭넓은 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분석변수

위의 <표 1>은 이 연구에서 투입되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변수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의향은 첫째, 지역 문제 발생 시 적극적 해결의사, 둘째,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 참여의사, 셋째, 공청회 등 참여의사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단순히 도시재생사업 적극참여의사를 물어보는 문항만으로도 주민참여 의향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세 차원으로 결과변수를 나누어 검정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지역문제 해결의사와 공청회 등의 참여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괄되기 때문에(Graves, 1972; Strange, 1972) 주민참여를 단순히 사업 참여 의사만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결과변수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⑥ 매우 그렇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는 McMillan 과 Chavis(1986)가 제시한 네 가지 공동체의식의 분류를 토대로 설문지를 만든 최문형과 정문기(2015)의 문항을 고려해 분석 자료에서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먼저 소속감은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며, 다음으로 영향력은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을 묻는 문항,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을, 마지막으로 공유된 정서적 연결은 지속적인 거주 희망을 묻는 문항을 선별하여 투입한다. 이들 설명변수 역시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⑥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명변수의 Cronbach의 α 값은 .87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조절변수는 정치성향을 물어보는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① 매우 보수적이다부터 ⑥ 매우 진보적이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성별과 연령,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은 여성이 1점으로 가변수로 되어있으며, 연령은 ① 18세 이하부터 10년 단위로 ⑥ 60세 이상까지,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이하, ③ 대학원 졸업 이상, 가구소득 수준은 100만 원 단위로 ① 200만 원 미만부터 ⑩ 1,000만 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변수설정

구분		변수측정
결과 변수	지역 문제 발생 시 적극적 해결의사(주민참여의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 참여의사(주민참여의사)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그렇다
	공청회 등의 적극적 참여의사(주민참여의사)	⑥ 매우 그렇다
통제 변수	성별	⑩ 남자 , ⑪ 여자 (이분형)
	연령	① 18세 이하 ~ ⑥ 60세 이상 (10년 단위)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이하, ③ 대학원 졸업 이상
	가구소득	① 200만 원 미만 ~ ⑥ 1,000만 원 이상 (100만원 단위)
설명 변수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소속감)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정도(영향력)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이웃과의 관계(육구의 통합과 충족)	⑤ 만족한다 ⑥ 매우 만족한다
	지속적인 거주희망(공유된 정서적 연결)	
조절 변수	정치성향	① 매우 보수적이다 ② 보수적이다 ③ 약간 보수적이다 ④ 약간 진보적이다 ⑤ 진보적이다 ⑥ 매우 진보적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인과적 관계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기본적으로 분석방법은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세 결과변수는 모두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⑥ 매우 그렇다의 6점 리커트 척도이다. 여기서 이 6점 척도를 간격척도(interval scale)로 간주할 수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동일 간격을 가진 척도로 보고 선형회귀분석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방식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3단계 방식에 따르면, 모형 I에서는 통제변수와 설명변수를 투입한 분석을 진행하고, 모형 II에서는 추가로 조절변수를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III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는데, 여기서 모형 간에 결정계수 R^2 이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명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분석모형은 모형 II로 하며, 모형 III은 상호작용

용향의 결과를 통해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투입할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Aiken과 West(1991)의 제시에 따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통해 변수들을 가공해 계산하였다. 이는 변수의 원래 값에서 변수의 평균값을 빼 상관관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간의 선형관계에서 존재하는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되는 표본 62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그중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성이 43.2%, 여성이 56.8%로 여성 응답자가 더 많았다. 연령의 경우 만 40세부터 만 49세까지가 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 30세부터 만 39세 사이의 응답자가 29.9%로, 만 19세에서 만 29세가 18.8%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구간이 2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400~500만 원 구간이 18.3%, 200만 원~300만 원구간이 17.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72.7%가 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왔고, 대학원 졸업 이상도 12.4%로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622	100
성별	남자	269	43.2
	여자	353	56.8
연령	만19세~만29세	117	18.8
	만30세~만39세	186	29.9
	만40세~만49세	193	31.0
	만50세~만59세	84	13.5
	만60세 이상	42	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3	15.0
	대학교 졸업 이하	452	72.7
	대학원 졸업 이상	77	12.4

구분		빈도	백분율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3	10.1
	200~300만 원 미만	111	17.8
	300~400만 원 미만	144	23.2
	400~500만 원 미만	114	18.3
	500~600만 원 미만	70	11.3
	600~700만 원 미만	47	7.6
	700~800만 원 미만	34	5.5
	800~900만 원 미만	11	1.8
	900~1,000만 원 미만	10	1.6
	1,000만 원 이상	18	2.9

다음으로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주요 변수는 6점 척도이며, 대부분 평균이 절반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과변수인 주민 참여의사는 공청회 등 참여의사의 평균이 3.74, 도시재생 사업의 참여의사가 3.87, 지역문제 적극적 참여의사가 3.9로 공동체 참여 의향이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설명변수인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 역시 만족도가 높았는데, 평균이 가장 낮은 이웃관계의 평균은 3.74, 다음으로 지역소속감은 평균 3.82로 나타났고 지역애착이 3.97, 지속적인 거주희망이 4로 높게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정치성향은 평균이 3.76(S.E.=.874)으로 중도에서 약한 진보 사이가 평균적인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문제 적극적 해결의사	622	1	6	3.90	.90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 참여 의사	622	1	6	3.87	.93
공청회 등 참여의사	622	1	6	3.74	1.00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	622	1	6	3.82	.99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정도	622	1	6	3.97	1.03
이웃과의 관계	622	1	6	3.74	1.00
지속적인 거주희망	622	1	6	4.00	1.09
정치성향	622	1	6	3.76	.85

2. 지역공동체 의식이 지역문제 발생 시 적극적 해결의사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 4>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지역문제 발생 시 적극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방식에 따라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모형 III의 AxE, BxE 상호작용항이 각각 4.0, 4.8이 나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나머지 변수들은 대부분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수용할만한 기준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값 역시 1.99로 2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 잔차들 간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과 수정된 R^2 의 값은 모형I가 각각 12.9%/11.8%, 모형II가 13.8%/12.6%, 모형III이 14.4%/12.6%로 나타났다.

1단계 분석결과인 모형 I은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beta=.09, p<.1$) 외에는 유의수준 내의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없었으며, 설명변수 중에는 이웃과의 관계($\beta=.18, p<.001$)와 지속적인 거주 희망($\beta=.03, p<.05$)이 유의수준 내의 결과를 보였다. 조절변수인 정치성향 변수를 함께 투입한 2단계, 모형 II의 결과에서는 통제변수 중 역시 1단계에서 유의수준 내에 있던 연령($\beta=.10, p<.1$)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는 기존의 유의수준 내 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거주지역 애착($\beta=.11, p<.1$)이 미약한 수준이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인 정치성향의 경우 유의계수(β)는 .10($p<.05$)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한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 분석, 모형 III에서 통제변수는 역시 연령이 유의수준 내의 변수로 확인되었다. 설명변수 중 거주지역 애착($\beta=.10$)과 지속적인 거주희망($\beta=.04$)이 유의수준 밖으로 떨어졌으며, 상호작용항의 경우 유의수준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종합해보면, 연령과 거주지역 애착 수준이 높고 이웃 관계가 좋을수록, 또 지속적인 거주 희망이 높고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지역문제 발생 시 적극적 참여의사가 높아진다. 하지만 정치성향은 상호작용항의 결과값이 유의수준 밖에 있으므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지역공동체 의식이 지역문제 발생 시 적극적 해결의사에 미치는 영향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	-.04	.07	-.02	-.04	.07	-.02	-.03	.07	-.02
연령	.07	.03	.09 [†]	.08	.03	.10 [†]	.08	.03	.11 ^{**}
학력	.09	.07	.05	.09	.07	.05	.10	.07	.06
가구소득	-.00	.02	-.00	-.00	.02	-.01	-.01	.02	-.01
거주지역 소속감(A)	.08	.06	.09	.06	.06	.07	.06	.06	.06
거주지역 애착(B)	.09	.06	.10	.10	.06	.11 [†]	.09	.06	.10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β	b	S.E.	β	b	S.E.	β
이웃과의 관계(C)	.16	.04	.18***	.16	.04	.18***	.16	.04	.18***
지속적인 거주희망(D)	.03	.05	.03*	.02	.05	.03*	.03	.05	.04
정치성향(E)				.10	.04	.10*	.10	.04	.10**
AxE							.07	.06	.08
BxE							.04	.07	.05
CxE							-.02	.05	-.02
DxE							-.07	.05	-.08
R ²	.129			.138			.144		
수정된 R ²	.118			.126			.126		

† p<.1, * p<.05, ** p<.01, *** p<.001

3. 지역공동체 의식이 도시재생사업 적극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값을 확인한 결과, 지역문제 참여의사와 마찬가지로 모형 III의 'AxE', 'BxE' 상호작용항이 각각 4.0, 4.8 이 나왔고 나머지 변수들은 대부분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2.05로 역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R²과 수정된 R²의 값은 모형 I가 각각 14.8%/13.7%, 모형 II가 16.7%/15.4%, 모형 III이 17.7%/15.9%의 모형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모형 I은 통제변수 중 연령($\beta=.16, p<.001$)과 학력($\beta=.17, p<.05$)이 유의수준 내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설명변수 중에는 거주지역 애착($\beta=.11, p<.1$), 이웃과의 관계($\beta=.14, p<.01$)와 지속적인 거주희망($\beta=.11, p<.1$)이 유의수준 내의 결과를 보였다.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형 II의 분석결과는 통제변수 중 학력($\beta=.09, p<.01$)의 유의수준이 올라갔다, 설명변수는 거주지역 애착($\beta=.12, p<.05$)의 유의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조절변수인 정치성향($\beta=.14, p<.001$) 변수 역시 유의수준 내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모형 III에서 상호작용항의 경우 '지역소속감(A)x 정치성향(E)'의 유의계수(B)가 .18($p<.01$)로 정(+)의 효과를, '지역애착(B)x 정치성향(E)'의 유의계수(B)가 -.06($p<.05$)로 부정(-)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소속감 변수 자체는 유의수준을 넘어선 결과를 보여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주지역 애착이 높고 이웃 관계가 좋을수록, 또 지속적인 거주 희망이 높고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참여의사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역소속감은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참여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지역 애착은 정

치성향과 상호작용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BxE'). 하지만 지역소속감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AxE'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BxE' 외의 나머지 상호작용항의 경우 결과값이 유의수준 밖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부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지역공동체 의식이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	-.03	.08	-.02	-.04	.08	-.02	-.02	.08	-.01
연령	.13	.03	.16***	.14	.03	.17***	.14	.03	.18***
학력	.16	.07	.09*	.17	.07	.09**	.17	.07	.10**
가구소득	-.01	.02	-.02	-.02	.02	-.03	-.02	.02	-.04
거주지역 소속감(A)	.03	.06	.04	.01	.06	.01	.01	.06	.01
거주지역 애착(B)	.10	.06	.11 [†]	.11	.06	.12*	.10	.06	.11 [†]
이웃과의 관계(C)	.13	.05	.14**	.13	.05	.14**	.13	.05	.14**
지속적인 거주희망(D)	.10	.05	.11 [†]	.08	.05	.10 [†]	.10	.05	.11**
정치성향(E)				.15	.04	.14***	.15	.04	.14***
AxE							.16	.07	.18**
BxE							-.05	.07	-.06**
CxE							-.02	.06	-.02
DxE							-.08	.05	-.09
R2	.148			.167			.177		
수정된 R2	.137			.154			.159		

[†]p<.1, * p<.05, ** p<.01, *** p<.001

4. 지역공동체 의식이 공청회 등의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아래의 〈표 6〉은 지역공동체 의식이 공청회 등의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값을 확인한 결과, 전술한 분석모형에 이어 모형 III의 AxE, BxE 상호작용항이 각각 4.0, 4.8이 나왔고 나머지 변수들은 대부분 1에서 2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98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 상관관계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정계수 R²과 수정된 R²의 값의 값은 모형 I에서 14.9%/13.8%, 모형 II에서 15.7%/14.5%, 모형 III에서 17.0%/15.2%로 나타났다.

모형 I은 통제변수 중 연령($\beta=.20, p<.001$)과 학력($\beta=.09, p<.01$)이 유의수준 내에서 정(+)의 효과

를 나타냈다. 반면 성별의 경우 $-0.067(p<.1)$ 로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설명변수 중에는 거주지역의 소속감($\beta=.12, p<.01$), 이웃과의 관계($\beta=.17, p<.001$)가 유의수준 내에서 정(+)의 효과를 가졌다. 모형 II의 분석결과는 통제변수는 모형 I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조절변수인 정치성향($\beta=.09, p<.05$)도 유의수준 내의 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변수 역시 유의수준 내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지역의 소속감은 유의확률이 낮아졌고, 거주지역 애착의 경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III은 성별의 영향이 유의수준 밖으로 감소하였고, 상호작용항은 '지역소속감(A)x정치성향(E)'의 유의계수(β)가 $.13(p<.1)$ 로 정(+)의 효과를 가졌다. 더불어 '거주희망(D)x정치성향(E)'의 유의계수(β)가 $-.15(p<.01)$ 로 부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적극적인 거주희망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외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이웃 관계가 좋을수록,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공청회 등의 참여의사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거주지역 소속감은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참여의사에 정(+)적인 영향을('AxE')영향을 보인다('DxE').

〈표 6〉 지역공동체 의식이 공청회 등의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	-.14	.08	-.07 [†]	-.14	.08	-.07 [†]	-.13	.08	-.07
연령	.17	.04	.20 ^{***}	.18	.04	.20 ^{***}	.18	.04	.21 ^{***}
학력	.18	.07	.09 ^{**}	.18	.07	.09 ^{**}	.19	.07	.10 ^{**}
가구소득	-.01	.02	-.03	-.02	.02	-.04	-.02	.02	-.05
거주지역 소속감(A)	.12	.06	.12 ^{**}	.11	.06	.11 [†]	.11	.06	.11 [†]
거주지역 애착(B)	-.01	.06	-.01	-.44	.06	.00	-.02	.06	-.02
이웃과의 관계(C)	.17	.05	.17 ^{***}	.17	.05	.17 ^{***}	.16	.05	.16 ^{***}
지속적인 거주희망(D)	.06	.05	.06	.05	.05	.06	.07	.05	.08
정치성향(E)				.11	.05	.09 [*]	.10	.05	.09 [*]
AxE							.12	.07	.13 [†]
BxE							-.03	.08	-.04
CxE							.00	.06	.00
DxE							-.14	.06	-.15 ^{**}
R2	.149			.157			.17		
수정된 R2	.138			.145			.152		

[†] p<.1, * p<.05, ** p<.01, *** p<.001

5. 토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 애착과 거주 의향,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지역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참여의사가 높다. 둘째, 연령과 학력이 높음과 동시에 거주지역 애착과 이웃 관계 만족 및 거주의향이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참여의사는 높아진다. 더불어 거주지역 애착과 도시재생 적극참여의사 사이에 정치성향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진다. 셋째,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의 소속감과 이웃 관계 만족도가 높고 진보적인 정치성향일수록 공청회 등의 참여의사가 높아진다. 또 거주지역의 소속감과 공청회 등 참여의사 사이에 정치성향은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제변수 중 연령과 학력은 모두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고령일수록 행정계획이나 마을만들기 등의 주민의 참여의사가 높게 보고되지만, 학력의 경우 고학력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모두 확인되는 쟁점적 변수이다(김홍순·원준혁, 2013). 사실 고령일수록 은퇴 등의 사유로 여유시간이 많고,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긴 만큼 지역에 애착도 많은 지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민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의 참여가 소극적인 상태로 중·장년층 중심의 주민참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활력이 다소 저하되거나 노인 위주의 의견들이 개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연령의 주민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학력 역시 고학력자의 공공사업에의 참여가 높은 것이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민 집단 내의 위계화된 학력을 통해 누군가가 의견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섬세한 안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거주지역 애착과 소속감, 이웃관계 만족도 등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주민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해준다(양덕순·강영순, 2008; 최문형·정문기, 2015). 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어용적인 행정 주도형이나 형식적인 민관협력형보다는 주민자치형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을 암시한다. 즉, 자생적 주민조직이 지닌 공동체 의식이나 자치의식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정치·행정 및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생적 주민조직은 특정 직업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다수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함은 물론 스스로 그 해결 대안을 강구한다(Arnstein, 1969).

마지막으로 정치성향과 주민참여의 관계에서 진보적 정치성향의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형 행정제도를 선호하는 흐름이 진보이념에서 강하다는 선행연구의 일관된 흐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도시재생이 진보정치의 전유물이라는 색안경의 영향을 배제하고 바라보긴 어렵다.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이념에 가까울수록 경제개발비 지출이 많다는 점(최정열·박석희, 2014)과 진보이념을 가진 시민들이 개발자본을 반대하는 점(정은경 외, 2011)을 고려해보면, 보수

이념을 추구할수록 전면적 도시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진보이념을 추구할수록 개발을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재생특별법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2013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왔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도시재생이 처음부터 개발 논리를 반대하는 진보 정치적 측면에서 등장하였다고 보기엔 어렵다. 결국, 진보이념을 표방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제가 도시재생이 되면서 도시재생이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버린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원순 시정과 문재인 정부의 반 개발·친 보존정책이 이념적 측면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보수진영의 개발성장 논리와의 차별성이 더 도드라졌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치적 색안경을 씌우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부동산가격의 폭등, LH 사태와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박탈감 등을 활용하며 도시재생을 '벽화 그리기 사업' 등으로 몰아세우는 보수진영의 공격과 함께, 선거를 위해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여당까지 자가당착적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을 완화하고 재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친 성장·개발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최혁규, 2021). 이러한 정치적 논란 속에서 '도시재생은 실패했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깊어지고, 더욱이 텃입혀진 정치적 색채가 더욱 선명하게 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진보이념일수록 주민참여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맥락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추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발하던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의 참여요인을 확인해보고자 전국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해 공동체의식의 측면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응변수인 주민참여의 형태를 지역문제 적극적 해결의사,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의사, 공청회 등의 참여의사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변수인 지역공동체 의식의 수준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경로 사이에 정치성향이 중재변수로 작용한다는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방식을 민관협력형보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주민참여사업의 핵심가치인 주민참여는 '주민주권(residents sovereignty)', 곧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주민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순은 2012; 권자경, 2016). 이렇게 온전한 주민주권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공적 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Chandler, 2010).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이 상향식 사업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 도시재생의 제도적 확산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직적 형태를 보인다는 점은 주민주권이 이루어지는 기본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결국, 예산을 쥐고 있는 행정이 지나친 주민 통제와 간섭을 추구하거나, 돈을 주는 만큼 어용적 주민참여를 기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 행정주도형 혹은 민관협력형의 한계로 주민의 저조한 참여를 가져왔다는 사실에서 주민주권적 접근에서 참여의 기본요인인 지역공동체 의식을 경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가진 주민들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을 설정해 예산까지 배정한 후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은 행정이 사업계획을 다 제공해주길 바라는 소극적 참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신현주·강명구, 2017), 행정이 자원을 배분하며 도시재생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의 현행방식의 적극적 행정개입을 최대한 행정의 소극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등의 조합 설립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조합을 설립해 주민들이 자발적 이익 추구하고 사업을 진행할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합형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현행 도시재생센터 지원방식보다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를 활용한 위탁 방식의 운영이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에 얽힌 정치적 색안경을 제거하기 위해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재생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 사실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닌 시민들의 적극적 도시재생 참여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만성화된 오해가 자칫 모든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일부 주민의 이념에 편향시키거나 다른 이념성향의 주민을 배제하게 되는 가능성을 염두해, 더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참여요인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정적 주거환경을 가진 보수적 이념성향의 지역주민들은 지역과 관계가 깊고, 경제적 안정과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보이기도 한다(Verba & Nie, 1972; Verba, Schlozmann & Brady, 1995; 백영민 외, 2016).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반 개발·친 보존이라는 이념적 모호에서 부여된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성향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자 폭넓은 주민참여의 저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주민참여주체를 확대하기 위해선 마을공동체 보존이라는 이상적인 의미만 강조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비용적 한계로 모든 지역이 전면적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기에, 공동체를 유지하며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정주여건을 확립한다는 도시재생의 실용적 가치를 재정립해 모든 주민의 참여를 유인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운영위원을 모집하되 사업참여의 다양성을 높이고 골고루 참여가 가능한 연령별 균등배정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이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가장 활발하게 도시재생뉴딜이 진행되던 시기(2019년)의 자료로써의 의미가 있으나 시차가 있는 관계로 최근의 변화한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도시재생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 비교적 표본수가 많고 전국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층화표집을 고려하지 못해 표본의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구집단을 포괄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측정도구에 있어 설문문의 정교성이 부족한 점,

기존자료를 최신 상황에 맞게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국의 도시재생뉴딜지역의 거주민으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고, 선행연구와 비교해 비교적 표본 수가 많아 표본오차가 적고, 일반화 가능성이 큰 주민참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특히 정치성향이라는 논쟁적 변수를 활용해 새로운 인과적 경로모형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측면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더불어 의미있는 정책적 개선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종구·문국경. (2022).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주거학회논문집」, 33(1): 87-95.
- 구기환·김세용. (2023). 도시재생뉴딜사업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 - 도시재생 담당자의 추진과정 평가와 지역주민의 사업내용 평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24(3): 59-78.
- 권기덕·정남식. (2020).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구성요소가 주민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1): 89-117.
- 권자경. (2016).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2): 135-162.
- 김나형·문국경. (2022). 지역공동체 의식이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6(2): 283-310.
- 김세용·박현수. (2006). 도시계획과정에서 웹 기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 지리학회지」, 40(2): 199-211.
- 김순은. (2012).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행정연구」, 26(1): 3-30.
- 김정인. (2022).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117-144.
- 김흥순·원준혁. (2013).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마을 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4(1): 93-111.
- 박정서. (2012). 청소년의 정보추구 정치참여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학 연구」, 19(10): 45-71.
- 백영민·김용찬·채영길·김유정·김예란. (2016). 시민들의 가치지향, 정치적 이념성향,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의 관계: 서울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7(1): 239-263.
- 신현주·강명구. (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3): 25-46.
-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 수도권편」. 서울: 후마니타스.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 25-43.

-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평과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3): 791-820.
- 이혜림·이영라. (2020). 시민참여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행정논총」, 58(1): 245-269.
- 임광명. (2017).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유형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특성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4(4): 237-248.
- 엄태호·윤성일. (2013).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4): 39-64.
- 양덕순·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5-93.
- 양재섭·김태현. (2011).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유란희·김선형.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연구 - 동형화 이론의 검증을 통한 확산의 이해 -. 「한국정책학회보」, 26(3): 51-80.
- 진은애·이우중. (2018).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가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5): 77-88.
- 정명은. (2018).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보」, 46(2): 85-114.
- 정은경·정혜승·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5(4): 93-105.
- 최문형·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 최상한. (2010).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87-113.
- 최정열·박석희. (2014).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 비교. 「지방행정연구」, 28(4): 99-125.
- 최종현·최호진. (2019). 「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최혁규. (2021).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문화정치: 개발에서 재생으로, 그리고 재개발로?. 「문화과학」, 106: 157-175.
- 채혜원·홍형욱. (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가정과삶의질연구」, 20(1): 33-44.
- 황희연·이민화. (2020).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서울: 보성각.
- 홍성우. (2016).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례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 - EPG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3(3): 209-23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 Sage Publications, Inc.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Alford, R. R., & Friedland, R. (1975).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ublic Polic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429-479
- Bachrach, K. M., & Zautra, A. J. (1985). Coping with a community stressor: The threat of a hazardous waste fac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2): 127-14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rn, S. M., & Konrad, A. M. (1987). Political Participation: A Matter of Community, Stress, Job Autonomy, and Contact by Political Organizations. *Political Psychology*, 8(1): 125–138.
- Burke, E. M. (1968). Citizen Participation Strategie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4(5): 287–294.
- Chandler, J. (2010). A Rationale for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tudies*, 36(1): 5-20.
- Claibourn, M. P., & Martin, P. S. (2000). Trusting and Joining? An Empirical Test of the Reciprocal Nature of Social Capital. *Political Behavior*, 22(4): 267–291.
- Graves, C. W.,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Metropolitan Plann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3): 42-46.
-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9-818.
- Gusfield, J. R. (1975). *Community : a critical response*. Oxford: Blackwell.
- Huntington, S. P., & Nelson J.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cMillan, D. (1976). *Sense of community: An attempt at defi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T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Peterson, S. A. (1992). Church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pillover Effect.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0(1): 123-139.
- Rahn, W. M., Brehm, J., & Carlson, N. (1999). National Elections as Institutions for Building Social Capital. In Fiorina, M. & Skocpol, T. (ed.),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pp. 111-160). Brookings Institution and Russell Sage: 111-160.
- Strange, J. H.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on and Model Cities Program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655–669.
- Tocqueville, A. D., Mansfield, H. C., & Winthrop, D. (2000). *Democracy in America: Translate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ba, S. (1967). Demographic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73(1): 53-78.
-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Zimmerman, J. F. (1972). Neighborhoods and Citizen Involv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3): 201-210.

구기환(具祺桓): 구기환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도시재생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및 주택정책, 도시·지방행정, 지역균형발전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사회적 혼합단지와 임대전용단지 입주민의 주거환경 인식 비교연구”(2024), “사회적 혼합단지의 주거환경요인이 임대 입주민의 소셜믹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2023), “도시재생사업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2023) 등이 있다. (robertgu@korea.ac.kr).

〈논문접수일: 2024. 4. 17 / 심사개시일: 2024. 4. 17 / 심사완료일: 2024. 5. 20〉

Abstract**Civic Engagement in Urban Regeneration:
Examining the Role of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Gu, Gihwa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on their intention to engage in urban regeneration initiatives, while also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orientation. Utilizing survey data from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he research aims to discern how community cohesion fosters citizen involvement and enhances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processes aimed at addressing local challenges. The findings reveal several key insights. Firstly, factors such as age, attachment to the area, satisfaction with neighborhood relations, and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positively affect residents' willingness to address local issues actively. Secondly, age, education level, neighborhood attachment, satisfaction with neighborhood relations and residency, and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sidents' inclination to participat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oreover, political orientation plays a moderating role, negatively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attach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Additionally, gender, age, education level, satisfaction with the neighborhood, and liberal political orientation are linked to residents' willingness to engage in public hearings, with political orientation positively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attachment and participation in public hearing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t impact of a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residents' propensity to engage in community initiative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and mitigating political polarization to foster greater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endeavors,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Key Words: Civic Engagement, Participatory Planning, Urban Regeneration, Sense of Community, Political Orientation